

시각장애이용 지팡이 개발 나선다

전주시가 시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보행 시 장애물을 발견하면 진동모터를 통해 알려주는 스마트 지팡이 개발에 나선다.

시는 시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IT에 새로운 기술을 접목한 인공보조 스마트 지팡이 개발에 착수한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시는 스마트 지팡이를 아주 작게 제작하거나, 손목이나 허리에 장착할 수 있는 웨어러블 장치를 활용한 제품 개발에 나설 계획이어서 장애인의 인권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가 이처럼 스마트 지팡이 개발에 나서게 된 것은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평등보행권 보장을 위한 것으로, 시 인권팀은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통신진흥원이 주관한 'I Create Town, 내가 만드는 마을' 착한상상

전주시, 초음파 센서 장착 스마트 지팡이 제작 추진

보행 장애물 인식시 진동모터 통한 이용자 경고 기능 보유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를 지원 받아 사업을 추진한다. 이 공모사업은 사물인터넷(IoT)과 클라우드(Cloud), 빅데이터(Bigdata), 모바일(Mobile), 인공지능(AI) 등 ICT기술을 활용해 민·관이 함께 환경과 안전, 복지, 학교폭력, 지역격차 등 국가·지역 현안을 해결 또는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시는 이날 전주비전대 신재생에너지과(책임교수 한우용)와 프로젝트 과제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11월까지 7개월 동안 스마트 지팡이 소형화와 웨어러블 장치를 활용한 제품 개발을 위한 위탁수행에 들어간다.

주요내용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초음파센서를 활용해 보행상의 장애물 유무와 위치를 사용자에게 진동으로 알려주는 제품을 시각장애인들의 시험평가 의견을 반영하여 개발하는 것이다. 또, 센서시스템과 충전식 전원장치 개발에도 나설 방침이다.

또한, 시는 3D프린터를 이용한 시제품 제작과 시연 과정에 시각장애인과 시각장애관련 전문가가 참여토록 해 이용자 중심의 제품을 개발하고, 개발된 제품을 시각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시연해볼 수 있도록 기회도 제공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제품 기술개발은

전주비전대학교 학생 8명이 참여하고, 한국정보통신진흥원의 전문가 컨설팅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인적교류 등을 통해 기술력을 습득할 수 있어 청년 창업과 일자리 연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들이 차별 없이 공평하고 편리한 보행권을 보장받고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공모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다.

전주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접근해 다양한 차이를 존중하는 것이 평등이다. 시각장애인들의 보행권도 평등한 확보를 통한 안전한 보행은 도모하겠다"라며 "앞으로 지역사회 전반에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근 기자

'어르신들 건강 책임져 드립니다'

전주시보건소, 12일까지 경로당 건강관리사업 추진

전주시가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효자노릇을 북돋고 있는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을 지속 전개한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경숙)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8일부터 12일 까지 방초경로당 등 40여개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인 '100세 행복 경로당 건강관리사업'을 진행한다.

이 사업은 100세 시대를 맞아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에게 기초검진 및 보건교육, 진료·건강상담 등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민선6기 주요 공약사업으로, 보건소는 지난 3월부터 상반기 사업에 선정된 50개 경로당을 찾아가고 있다.

이 기간 중 보건소 통합 건강증진팀은 방초경로당 등 11개 경로당을 찾아가 건강생활실천 등 6가지 통합증진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측정, 심뇌혈관질환 예방 교육 및 상담 △노년기 영양관리 교육 △치매인지검사, 치매선별 검사, 치매예방교육 △노년기 구강건강관리 상담 및 교육 △노년기

운동교실 등이다. 이를 통해, 보건소는 어르신들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도움 계획이다.

또한, 30개 경로당에는 전주시의 사회와 전주시민의사회, 전주시지역 각 의사회 회원들이 찾아가 양·한방·치과 진료·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오는 6월까지 진행되는 상반기 사업에 이어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50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료자원들과 연계한 하반기 행복경로당 건강관리사업에 총 14억80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와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는 올해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생활을 돕기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에 총 14억8000만원을 투입해 지역아동센터연계지원과 노노케어 등 11개 공익활동 사업을 통해 672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시는 '희망하는 손수레' 사업을 통해 폐지를 수거하면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관리와 생계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김민근 기자

야산 무허가 토석 채취 50대 검거

전북경찰청은 8일 무허가로 야산에서 토석을 채취한 A씨(51,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1년간 허가 없이 진안군의 한 야산에서 토석을 불법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진안군 공무원 B씨와 짜고 불법으로 토석을 채취한 것으로 보고 B씨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채취 과정에서 공무원과의 유착이 거의 확실시 된다"고 밝혔다. /김민근 기자

이웃집 마당에 불지른 40대 입건

8일 군산경찰서는 이웃집 마당에 불을 지른 A씨(41,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지난 3월 30일 오전 8시30분께 군산시 삼학동의 B씨의 집 마당에 존재하던 쓰레기 더미에 불을 붙여 2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전날 자신을 때린 B씨에게 앙심을 품고 방행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근 기자·군산=장형 기자



쏟아진 세월호 내부 구조물

8일 오후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에서 코리아세이버 작업자들이 미수습자를 찾기 위해 세월호 좌현 선미 4층 상판을 절단한 가운데 내부 구조물이 쏟아지고 있다.

도선관위, 특정 후보자 기표한 투표지 촬영 SNS에 올린 선거인 고발

"선거 당일 기호 표시한 투표인증샷 올리는 것은 가능"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게시한 A씨를 8일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 고발했다. 선거인 A씨는 지난 4일 부안군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한 후 투표지를 촬영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

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당일에도 기호 등을 표시한 투표인증샷을 촬영해 SNS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나 다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며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인재용 기자

지방재정 확충·공평과세 구현

전주시, 올 상반기 법인 정기세무조사 세액 4억원 추징

전주시가 한층 강화된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은닉세일을 발굴하면서 지방재정 확충과 공평과세 구현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시는 2017년도 상반기 법인 정기세무조사와 기획세무조사를 통해 14분기에만 총 130여건에 4억원의 세액을 추징했다고 4일 밝혔다.

주요 추징내용을 살펴보면, △법인 토지구입과 건물신축 관련 취득가액 누락 취득세 등 9300만원 △지방세감면 관련 고유목적 미사용과 가설건축물 미신고 등 2억9000만원 등이다.

일례로, A법인은 공동주택 부지조성 과정에서 토지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자진 신고·납부하지 않아 취득세 8200만원이, B법인은 임대무기간 내 매각으로 8400만원이 추징됐다.

이와 관련, 시는 법인 정기세무조사 대상으로 최근 3년 이내 6억원 이상 대형 부동산을 취득했거나 기존에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 최근 4년 이내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을 위주로 100곳을 선정 집중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시는 지방세 취약분야인 농업법인 감면부동산 목적 외 사용 여부조사, 상속재산 미신고분에 대한 조사 등 사례를 기획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

신계숙 전주시 세정과장은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공평과세 기반을 확립하고, 은익·탈루세일 발굴로 지방재정 확충해나갈 것"이라며 "기업의 자진 납세 분위기 확산을 적극 유도하고, 지방세 신고제도 사전안내로 행정의 신뢰기반을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불필요한 세무조사를 최소화하기 위해 직접 방문조사는 최대한 지양하며, 비협조적이거나 허위 및 비과세·감면받은 법인에 대해서는 철저한 현장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김민근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